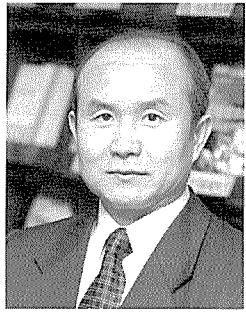


산업맥박

IPTV 어디로 가나



이현덕 이사
전자신문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기술을 선점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앞선 기술이 표준이 되고 그것이 시장을 지배하는 법이다.

이런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IPTV는 관할권 다툼으로 진전이 없다.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준비를 해놓고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IPTV는 초고속망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다. 형식은 통신이고 내용은 방송이다. 지상파나 케이블, 위성이 아닌 초고속인터넷을 TV에 연결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다.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만 볼 수도 있다. 기존 서비스에 비하면 장점이 많다.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콘텐츠나 가전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니 IPTV 관할권을 놓고 부처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정보통신부는 IPTV가 부가통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원회는 IPTV가 별정방송이라고 규정한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기본법상 IPTV는 방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채널이 아닌 패킷통신으로 본다는 것이다. 만약 방송위 주장대로라면 현재 유무선 인터넷 공간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 인정받아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IPTV는 디지털 IP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TV방송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IPTV가 유선망을 이용하여 역무제공을 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나름의 논리를 담고 있지만 속셈은 이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타결한다해도 난관은 남아 있다. 서비스 시기다. 서비스 시기를 놓고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가 초고속인터넷의 뒤를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바로 IPTV문제다. 기술수준이 국가경쟁력 잣대가 되는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다.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터진 일이다. IPTV는 지금 우리한테 해결해야 할 숙제중의 하나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 논쟁만 치열할 뿐 타결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IT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이 분야에서 시대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어느 분야건 기

이을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며 하루 빨리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블TV업계의 입장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케이블TV는 10년이 지나 이제 안정기를 맞고 있다. 매출도 늘어나 경영난도 해소되고 있다. 어렵던 살림살이에 햇살이 들만 하니까 대체재 성격을 띤 IPTV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무엇보다 케이블TV와 IPTV는 가입자 기반이 동일하다. 차이라면 지역과 전국이란 점이다. 케이블TV는 지역단위인데 IPTV는 전국권이다. 자본력을 가진 통신사업자들이 별다른 규제없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이들한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극단적으로 일부에서는 IPTV서비스 시기를 10년은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현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이들한테는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이 그만큼 힘에 부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IPTV를 놓고 각기 이해에 따라 해법이 다르니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그만큼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이다. 아직은 IPTV에 대해 어느 쪽의 입장 변화가 없다.

이같은 현실은 무엇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란 큰 틀의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문제를 해결했다라면 IPTV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IPTV 문제를 지금의 대치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 미루거나 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머리를 맞대고 타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시청자의 편익이다. 다음은 IPTV가 기술융합이나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점에 부합한다면 서비스 시기는 늦출 일이 아니다. 국민은 누가 관할권을 갖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할 뿐이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는 디지털 TV전송방식을 놓고 몇 년간 치루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그 결과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다. 시장의 선점기회를 놓쳤다. 곧장 가면 될 길을 힘겹게 논쟁하며 돌아 간 탓이다.

지금 세계는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게 시대의 변화다. 우리나라 IT산업은 정부와 민간 등이 일치단결해 노력한 결과 초고속성장을 이룩했다. 그 기반위에 IPTV란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다. IT기술 발전선상에서 보면 IPTV 등장은 필연적이다. 이미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가 집안 싸움으로 서로 IPTV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외국

은 저만큼 달리고 있다.

기술세계는 1등만이 살아 남는다. 오늘 신기술이 내일 구기술이 될만큼 기술변화는 빠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IPTV 조기 서비스는 필요하다. 세월만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 게 아니다. 기술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TV업계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서비스 영역을 재정비하고 케이블TV의 진입이나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또 IPTV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통신사업자의 끼워팔기나 결합판매, 요금할인 등의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들이 불공정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IT강국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초고속망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논쟁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큰 틀의 통신과 방송융합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이 늦어지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새로운 융합기술이 나타날 경우 지금처럼 서로 발목잡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중규제 또는 아예 규제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정책이 과학이나 기술을 발전시켰다. 지금은 기술변화가 정책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IPTV 문제도 미래와의 상생을 위한 솔로먼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 IPTV가 계속 제자리를 맴돌게 해서는 안된다.

MP3P의 차기 주자 PMP 특허출원 증가(PMP:휴대용멀티미디어 플레이어)

MP3P의 차기주자로 자리매김중인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PMP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MP3 플레이어에 소형 액정화면(LCD)과 플래시 메모리타입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여 동영상물의 재생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서, 인터넷, TV 등으로부터 음악, 동영상 학습 및 강연자료, 영화, 비디오게임 등의 동영상물을 다운받아 저장했다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동시간을 활용하여 자기계발 또는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재생장치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최근 PMP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지난 5년간 178건으로 2001년 22건에서 2003년 44건 그리고 2004년에는 66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붙임 1 참조), 이를 출원인별로 보면 내국인 출원은 170건(95%), 외국인 출원은 8건(5%)으로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내국인 출원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PMP특허출

원의 주된 기술 분야는 PMP의 고유 기능인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 이외에 이동 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부가 기능을 접목시키는 컨버전스 기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PMP는 보다 저렴하고 컴팩트한 사이즈, 다양한 기능과 컨텐츠 포맷의 지원에 따라 향후 기존 MP3 플레이어를 대체하고, 그에 따른 PMP 시장 규모도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고 민간연구기관의 통계분석에서도 전망하고 있다.

PMP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출원건수	20	22	26	44	66	178
내국인출원	18	22	24	43	65	170
외국인출원	4	0	2	1	1	8

PMP 국내 및 세계 시장 규모(출처 : 전자부품연구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수량(천대)	0	5	70	270	350	420	160.5
금액(억원)	0	30	350	1,080	1,260	1,360	130.3

세계 시장 규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수량(백만대)	0.1	0.3	0.8	2.3	3.9	6.5	129.5
금액(백만불)	48	122	278	721	1,068	1,574	101